

■ 서강대 입시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 사건(1995.11)

- 서강대 입시 서약서과동에 관한 인권단체 항의시위 보도자료
 - 성명서 : 서강대의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고발한다(민변 외 7개 인권단체).
 - 95학년도 전기모집 면접자료
 - 더 이상 서강은 우리의 자랑일 수 없다!(서강대 대학원 사회학과)
 - 한겨레신문, 인권하루소식 기사모음

등록		
	137	15

보도요청서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수신 : 각 신문사 사회부

제목 : 서강대 입시 서약서파동에 관한 인권단체 항의시위
보도요청서

일시 : 1995년 1월 16일(월)

별첨 : 성명서

매수 : 3쪽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796-8364)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월 13일 서강대학교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좌경폭력혁명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서약서를 입시지원생에게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인권운동단체는 서약서를 받은 행위를 새로운 매카시즘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합니다.

귀사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 래

서강대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고발한다

일시 : 1995년 1월 17일 아침 8시30분

장소 : 서강대학교 정문

참가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서양요코보

서양요코보... (faint text)

별첨

성명서

-서강대의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고발한다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 행사, 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인권선언 18조), 아무도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강제를 강요당하지 않는다(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8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인권선언 19조),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권리를 가진다(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조)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 그 누구인가?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구시대의 노예됨을 강요하는 자는 누구인가?

해피하다는 말로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지난 13일 서강대학교에서 치른 입학시험에서는 수험생이 서명해야 하는 서약양식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민주적 교육이념과 가톨릭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학술을 교수, 연구하며 진리에 따라 스스로를 이끌고...”이며, 하나는 “본인은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계급투쟁을 통한 좌경 폭력혁명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이다.

우리는 이 해괴한 일의 발생지가 최고지성의 모태인 대학이며, 그 결정의 주체가 대학 총장을 비롯한 교수집단이며, 각서를 요구받은 대상이 입학울 위해선 대학의 어떤 요구라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수험생이라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학사회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는 탄식이 절로 나옴에 허탈하기 까지 하다.

우리는 서약 내용의 문제점을 따지기 이전에 ‘서약서의 작성강요’ 그 자체만으로도 기본권의 엄청난 침해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문서에 서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굴욕감마저 든다”는 수험생의 말에서 대학당국이 배워야만 할 것이다.

전인류가 설정한 인권옹호의 기준인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을 보라. 이 선언을 조약화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조항을 보라. 최고지성의 대학이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이 진리를 탐구하고 자기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상, 신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이 당연하며, 이 자유를 얻기 위해 그동안 인류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가. 또한 그 과정이 대학의 잉태와 산고의 과정이었음을 대학 스스로가 자랑해 오지 않았던

가.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할 대학당국이, 입학이라는 중대사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수험생의 약점을 들어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한 사상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을 강요할 수 있는가?

그런 행위가 학문, 사상의 자유를 기본으로 한 대학이 스스로의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토록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세계화의 구호를 저버리는 짓임을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박홍 총장에게 묻고 싶다.

박홍 총장은 학문적 논리나 법적 증거도 없는 발언으로 우리사회를 메카시즘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다. 이번에도 그의 자질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으로 보며, 모든 수험생을 좌경폭력혁명에 대한 예비 가담자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인에 대한 비판세력은 학내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개인적 소신이 2천여 수험생에게 해괴한 각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아닌지 묻고 싶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학인들에게 촉구한다.

이번 서약서 파동의 책임자 뿐만 아니라, 교수단을 비롯한 대학인에게 묻고 싶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진정 사랑하고 지키겠냐고. 그렇다면 대학문에 첫발을 디딘 수험생들에게 몰아닥친 이 해괴한 메카시즘의 돌풍을 어찌하겠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대학의 기본권 유린에 대한 범대학인의 비판과 책임추궁이 있어야 함을 촉구한다. 또한 대학인의 상식을 회복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일관된 행동에 나설것을 기대한다.

양식있는 종교인의 자세를 촉구한다.

우리는 가톨릭적 세계관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엄연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서약서의 작성이라는 강제적 방법을 통해 이를 받아들이라는 데 있다. 가톨릭적 세계관을 교육할 자유와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우선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평화와 공존의 시대창조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지금, 과거의 유물인 억압과 제약의 무기를 대학이 들고 나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분노와 슬픔을 금치 못하며,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에 나선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각서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995년 1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95학년도 전기모집 면접자료

수험번호	제1지망 학 과	성 명
주 소 (연락처)	(Tel :)	

1) 본인은 서강대학교 학칙 제1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민주적 교육이념과 가톨릭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학술을 교수, 연구하며 진리에 따라 스스로를 이끌고 남을 지도하여 나라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로 교육 받겠습니다.

2) 본인은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계급투쟁을 통한 좌경 폭력혁명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1995. 1. 13

지 원 자 : _____ (서명)

<1> 학교 및 학과지원 동기를 간단히 쓰시오.

<2>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연 령	직 업 (근무처)	직 위

서강대학교 총장 귀하

(추천서번호)
연락처: 705-8260

더 이상 서강은 우리의 자랑일 수 없다!

우리는 95년도 서강대학교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서강이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기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한다.

95학년도 전기 모집 면접자료(서약서)에는 서강대학교 총장 앞으로 지원자가 서명하게 되어 있는 두가지 항목이 있다.

1. 본인은 서강대학교 학칙 제1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민주적 교육이념과 가톨릭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학술을 교수, 연구하며 진리에 따라 스스로를 이끌고 남을 지도하며 나라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인재로 교육받겠습니다.
2. 본인은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계급투쟁을 통한 좌경폭력 혁명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서약서 내용 중 두번째 항목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서강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서약서 내용상의 문제이다. 지난 여름부터 계속 언급되어 온 '주사파' 내지는 '좌경폭력 혁명'의 개념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문의 자율성과 사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어떠한 형태로든지.."라는 서약서의 문구가 도대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또한 의문스럽다. 특정한 사회과학자의 저술을 읽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좌경폭력혁명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상황에 우리는 당혹함을 감출 수 없다.

둘째, 이러한 서약서가 입시 면접상황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수험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과연 대학이 부르짖는 교육의 자율성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우기 대학당국의 총책임자가 이 서약서를 근거로 사법처리까지 언급했다는 사실(1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은 교육의 또다른 주체인 학생들에 대한 잠재적 폭력에 다를 아니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로 95년도 입시요강에 위와 같은 서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당일 위의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학교 당국의 의도를 의심케 만든다. 이것이 과연 가톨릭적 세계관을 표방하는 교육기관에서 할 일인가?

셋째,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서약서의 내용은 전체 교수회의에서 승인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과정 및 사실여부와 더불어 이것이 진정 전체 교수님들의 공통된 의견인지를 알고 싶다.

우리는 이와같은 반시대적, 반학문적 발상이 서강땅에서 가능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다시한번 서강공동체성원의 반성을 촉구한다. 현재 서강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알려진 일련의 움직임이 서강 공동체 전 구성원의 공통된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 이에 대한 전 서강인의 관심과 활발한 의견 개진을 바라는 바이다.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학생 일동



도시도봉구 수유동 310

성인이 5백여명인 덕적도. 주민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한 3백 50여명이 올라왔다고 한다. 무엇이 그들을 일어서게 했는가.
집회 도중인 2시에는 행여나 다를까 국무회의를 거쳐 핵폐기장터를 굴업도로 선정했다는 라디오 방송이 나왔다.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애정어린' 말과 함께.
덕적도는 자체 발전기로 전력을 충당한다고 한다. 원자력으로 전력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 육지인들이다. 핵쓰레기장을 멀리 떨어진 외딴섬에 짓겠다는 것이 자기집 쓰레기를 밤새 몰래 남의 집앞에 가져다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물며 지역언론 통제 등 구태의연한 발상까지 하면서 말이다.
김태선 / 인천시 북구 갈산동 178

더불어 생각하며

박홍 총장님, 자연의 진리 순종하십시오

박홍 총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모교 교수님들께 문안인사 드립니다.

저는 77년에 입학하여 83년 물리학과를 간신히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대 서강의 자람이어듯 서강 그대의 자람이어라"라는 말과는 달리 자람스럽게 살지 못해 왔던 제가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서강 언덕에 대하여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 감히 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땅이 건강해야 해충 이겨

아시다시피 농사와 농촌은 천하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천하의 근본인 이 땅의 농촌이 우투괴이라운드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모든 생명의 근본인 땅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농약과 화학비료 때문입니다. 농약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페니실린과 같은 화학약품(양약)의 강도를 높여가지만 바이러스의 면역성만 높아갈 뿐 몸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깜짝쇼·서약서 안타까워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유기농업과 자연건강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농약과 양

약으로보다는 땅과 물이 건강하면 해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연의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다지 북의 체제를 좋아하지 않고 이념적으로도 균형성을 유지하기 바라지만 저도 혹시 박홍 총장의 작년의 구분대로 한다면 종교계에 침투한 주사파로



김재일
UR기독교대학위 집행위원장

낙인찍혔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러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뜨겁던 지난해 여름에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듯 주사파를 '독충'으로 몰고 마침내 후배 신입생 면접에서마저 좌경 폭력조직엔 가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평범한 대자연의 원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총장님과 제도언론들 그리고 이른바 문민정부가 '주사파'란 해

충을 잡기 위해 그렇게나 열심히 농약을 쳤던 지난 여름에 이 땅의 농민들은 거의 농약을 치지 않았습다. 왜냐구요. 뜨거운 온도에서 익충은 견딜 수 있지만 해충은 오히려 활동이 뜸해지고 번식이 제거되기 때문이지요. 총장님은 늘 불세비키의 예를 들지만 공산당이 합법화된 미국이나 일본, 서유럽이 왜 공산화되지 않고 저렇게나 건전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오히려 소련은 왜 해체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회의 건강성과 면역성 즉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과 복지의 확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의 면역성이 중요

총장님이나 제도언론이 진정으로 주사파로부터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보호하시려거든 이 땅의 젊은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주사파로 공격하고 면접시험에서 서약서를 받을 것이 아니라, 깜짝쇼로 국민을 우민화할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의 해소와 부정부패의 일소 그리고 사상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의 건강성은 '농약'과 보호를 통해서는 아니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비판적 지성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무쪼록 보약과 양약이 아닌 일상적인 건강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컴퓨터를 제대로 알고 만드는 전문회사 - 제우정보

린터까지

"... 기..."

성명서

서강대의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고발한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 그 누구인가?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구시대의 노예됨을 강요하는 자는 누구인가?

해피하다는 말로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지난 13일 서강대학교에서 치른 입학시험에서는 수험생이 서명해야 하는 서약양식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민주적 교육이념과 가톨릭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학술을 교수, 연구하며 진리에 따라 스스로를 이끌고..."이며, 하나는 "본인은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계급투쟁을 통한 좌경 폭력혁명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이다.

우리는 이 해괴한 일의 발생지가 최고지성의 모태인 대학이며, 그 결정의 주체가 대학총장을 비롯한 교수집단이며, 각서를 요구받은 대상이 입학할 위해선 대학의 어떤 요구라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수험생이라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학사회가 이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는 탄식이 절로 나옴에 허탈하기 까지 하다.

우리는 서약내용의 문제점을 따지기 이전에 서약서 작성을 강요한 그 자체만으로도 기본권의 엄청난 침해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문서에 서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굴욕감마저 든다"는 한 수험생의 말에서 대학당국이 배워야만 할 것이다.

전인류가 설정한 인권옹호의 기준인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을 보라. 이 선언을 조약화한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조항을 보라. 최고지성의 대학이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이 진리를 탐구하고 자기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상, 신념, 종교의 자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 행사, 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세계인권선언 18조)

"아무도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강제를 강요당하지 않는다"(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8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19조)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권리를 가진다"(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조)

유가 보장되어야 함이 당연하며, 이 자유를 얻기 위해 그동안 인류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가. 또한 그 과정이 대학의 잉태와 산고의 과정이었음을 대학 스스로가 자랑해 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할 대학당국이, 입학이라는 중대사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수험생의 약점을 들어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한 사상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을 강요할 수 있는가?

그런 행위가 학문, 사상의 자유를 기본으로 한 대학의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토록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세계화의 구호를 저버리는 짓임을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박홍 총장에게 묻고 싶다.

박홍 총장은 학문적 논리나 법적 증거도 없는 발언으로 우리사회를 매카시즘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다. 이번에도 그의 자질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으로 보며, 모든 수험생을 좌경폭력혁명에 대한 예비가담자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학인들에게 촉구한다.

이번 서약서 파동의 책임자 뿐만 아니라, 교수단을 비롯한 대학인에게 묻고 싶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진정 사랑하고 지키겠냐고. 그렇다면 대학문에 첫발을 디딘 수험생들에게 몰아닥친 이 해괴한 매카시즘의 들뜸을 어찌하겠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대학의 기본권 유린에 대한 범대학인의 비판과 책임추궁이 있어야 함을 촉구한다. 또한 대학인들이 상식을 회복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일관된 행동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양식있는 종교인의 자세를 촉구한다.

우리는 가톨릭적 세계관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엄연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서약서의 작성이라는 강제적 방법을 통해 이를 받아들이라는데 있다. 가톨릭적 세계관을 교육할 자유와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우선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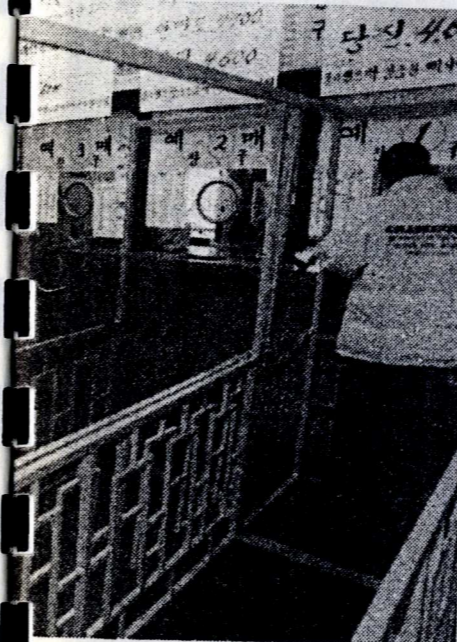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평화와 공존의 시대창조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지금, 과거의 유물인 억압과 제약의 무기를 대학이 들고 나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분노와 슬픔을 금치 못하며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에 나선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서약서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995년 1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불교인권위원회 /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년 가동

사치구에 설치



특별에매 첫날인 14일 서울 서초동 남부시의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종찬 기자

이밖에 현재 자치구별로 기준이 설정된 건축허가 수수료, 현장조사 대행료, 대지면적 최소한도, 지구별 건축조례 등에 대해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통합하도록 했다. 권오상 기자

“발동” 보복인사 말썽 해고등 15명 중징계

부정을 벌이고 있다. 회사측은 또 이들에 대한 부당 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해 배구시합을 하면서 '보복인사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고, 부당인사에 항의하는 유인물을 동료들에게 투치레 나눠준 노조 대의원 박미자(26·여)씨 등 7명을 지난 6일자로 해고했다. 또한 회사측은 이에 동참한 노

서강대 '서약서' 어법틀려 정반대 서명오류 신군부 재산몰수 무효 판결에 환영속 걱정

○...서강대가 지난 13일 수험생들에게 면접 전에 받은 '좌경 폭력혁명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문안이 국어문법에 어긋나 수험생들이 학교쪽의 의도와 정반대의 서명을 한 셈이 됐다. 박홍 총장과 교무위원들이 문안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된 이 서약서에는 "본인은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계급투쟁을 통한 좌경 폭력혁명에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 서약 내용대로라면 수험생은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기로' 서약한 셈이 되는 것이다.

서강대 국문과의 한 교수는 이 문안이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지 않고,"라고 고쳐져야 한다고 오류를 지적했다. 권태호 기자

○...80년 신군부가 정치인의 재산을 강제몰수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해당 서울민사지법 판사들은 "법리적으로 옳은 판결"이라면서도 "앞으로 진짜 재산추적에 문제가 있었던 정치인들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낼

너럭바위

경우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상 맞겠느냐"며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판사들은 "이번에 승소한 박영 특씨의 경우 야당정치인이었고 재산도 많지 않아 원고승소 판결에 잡음이 없지만, 이후라 전 중앙정보부장 등의 경우에는 재산 추적에 물의를 일으켜왔던 점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도 소송을 내면 동일한 법논리가 적용돼 재산을 되찾아 갈 수밖에 없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김의걸 기자

증발된 영수증 오리무중

○...1만5천장의 영수증이 다발째로 없어진 서초구청이 영수증 찾아내기에 급급하자 검찰이 "1만6백장을 보관중이니 찾아가라"고 하는 등 서울시의 영수증 관리가 허술해 전산입력단계부터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초구청의 영수증 증발과 관련해 검찰이 영수증을 찾아가라고 통보해 증발 영수증을 상당부분 되찾게 됐다"면서도 "나머지 4천4백장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권오상 기자

인사단행후 전화불통소동

○...경기도가 지난 12일 오전 본청 사무관급 84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자 2시간 가량 행정전화가 마비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경 인사가 발표되자 청내는 물론 시·군, 외부 등으로부터 인사 문의와 축하 전화가 쏟아지면서 행정전화 불통되는가 하면 일부 전화선은 일시적인 고장 사고를 빚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민원인들은 "인사 때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직도 공직사회에 인맥이 뿌리깊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배경록 기자

전용주거지에 주차장신축 허용

너비 12m이상 도로 접한곳..일반주거지 석유판매소 설립도

서울시 개정조례안 공포

전용주거지역 안에 별도의 주차장 건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시건축조례 개정안을 1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만 허용됐던 전

용주거지역에 대해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주차장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2층 이하이거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지어지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과 대지경계선과의 거리규정을 창문쪽 높이의 절반에서 4분의1로 완화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석유·가스

판매소의 건축이 허용되고, 현재 1만㎡까지로 제한돼 있는 일반·준주거·근린상업·자연녹지지역 안 아파트형 공장의 신축규모 제한을 없애 고용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선도로변 모서리에 있는 건축물은 가장 큰 출입구나 대문 등에 지번 표시가 의무화된 다. 권오상 기자

이주위의 달찌

전조주의보...18일 전국에 눈

날짜	16	17	18	19	20	21	지

1/4 (19)

서강대 좌경거부 서약서 파문

수험생들 "어이없다"... 총학생회 회수요구

권태호 기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문서에 서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굴욕감마저 든다." (김아무개 양·19·대원외국어고 졸업)

"입학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구속하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굳이 문서화할 필요까지 있느냐." (조아무개군·18·인천 동산고3)

"요즘 학생들은 시위도 하지 않는데 이런 것을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유치하다고 생각한다." (45·국문과 지원 수험생의 어머니)

서강대가 13일 면접을 치른 수험생 2천여명 전원에게 면접에 앞서 "계급투쟁을 통한 좌경 폭력혁명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라는 서약을 받아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서약문이 적힌 면접자료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수험생들은 물론 고사장에 동행한 많은 학부모들은 이 서약 강요에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면접자료는 지난 12일 입학준비를 위한 전체교수회의에서 박홍 총장이 "고려대에서 '호' 교육을 강조하며 지원 때 서약

서를 받았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시민을 양성하는 학풍을 만드는 의미에서 우리도 서약서를 수험생들에게 받기로 하자"고 제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서강대의 한 교수는 "교수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총장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문제지만 합격에 매달려야 하는 약자의 처지에 놓인 수험생들에게 좌경폭력혁명의 구체적 내용도 명시하지 않은 채 막지르는 듯한 학교의 태도는 또다른 의식화의 한 유형"이라고 말했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교내에 "대학은 자신이 가진 사상을 토론·연구하며 실현·실천하는 장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여 학교의 방침에 분명한 반대태도를 밝혔으며 오는 16일에는 중앙운영회의에서 구체적 대응방안과 행동지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는 수험생들이 이미 제출한 서약서를 모두 회수할 것을 학교에 정식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강대는 이에 대해 "학교 방침을 구체화한 결과물일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수험생들과 재학생들의 거부반응에 무척 곤혹스러워했다.

"총장실 유리깨졌다" 이유 서강대, 경찰에 수사의뢰

"던진 사람 밝혀지면 형사처벌·학칙징계"

15일 아침 6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본관 1층에 있는 박홍 총장 집무실의 대형 유리창 2장이 시멘트 벽돌에 맞아 깨져 있는 것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학교 경비원 기근(55)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순찰중 본관 1층을 점검해보니 총장 집무실 등쪽에 있는 가로 1m, 세로 2m 크기의 대형 유리창 2장에 가로 40cm, 세로 30cm 정도의 구멍이 뚫리고 금이 가 있었으며, 집무실 안에는 가로 20cm, 세로 15cm 크기의 건축용 시멘트 벽돌과 보도블록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서강대는 지난 13일 오후 실시된 95학년도 면접시험에서 학교측이 수험생들로부터 "좌경 폭력혁명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유리창을

깨 것으로 보고 관할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벽돌을 던진 사람이 서강대생으로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학칙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할 마포경찰서는 서강대의 수사요청에 따라 백철우 서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총학생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신승근 기자

인권하루소식 1995년 1월 17일 325호

서약서 강요는 기본적 인권 침해
서강대 재학생 86% "서약서 자체 부정적"

서강대학교(총장 박홍)가 신입생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좌경거부 서약서'를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후 사회적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서약서에 지원자들은 지난 13일 면접에서 수험생들은 서약을 해야 했다. 서강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심성필)는 16일 서약서 파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재학생 284명에게 조사한 바로는 '서약서 작성 자체가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6.6%(2백46명)이고 '서약서 작성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7.3%(24명)이며 '판단할 수 없다'는 학생은 6%(17명)이다. 또한 서명 무효화 처리에 대해 76%(2백15명)는 찬성했고 6.6%(26명)는 반대했다.

신경훈 부총학생장은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의 상당수는 '학교의 방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서약서는 모두 회수되어야 하며 수험생의 합격여부를 좌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은 어떠한 곳보다 자신이 가진 사상을 가지고 토론, 연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올바른 지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험, 실천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강대 대학원 사회학과 학생들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여름부터 언급되어온 '주사파'내지는 '좌경폭력혁명'의 개념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문의 자율성과 사상, 표현의 자유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면접상황에서 약자일 수 밖에 수험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서약서를 어기고 활동할 경우 징계처리 하겠다'고 언급한 사실(1월13일 MBC뉴스데스크 보도)은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생들에 대한 잠재적 폭력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약서 내용이 전체 교수회의에서 승인된 것인지 그 과정 및 사실여부와 더불어 이것이 전체 교수들의 공통된 의견인지 알고 싶다고 요구했다.

한편, 인권단체는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서강대 입시 서약서 파동에 관한 인권단체 항의시위'를 서강대 정문앞에서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문제의 서약서 내용>

2. 본인은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계급투쟁을 통한 좌경폭력혁명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995. 1. 13.

지원자: (서명)

인권하루소식 1995년 1월 17일 325호

서강대 박홍 총장 전화 인터뷰
항공기 탑승자의 무기를 검사하는 것은 당연

■ 서약서에 서약하지 않았다면 불합격 처리할 것인가?

- 물론 그렇게 할 것이다.

■ 서약서에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90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의 제18조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저촉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립학교는 그래선 안 되지만 사립학교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 총장님은 신앙인인데, 신앙인의 입장에서 서약서가 수험생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소지했는지 검사해야 한다.

■ "대학은 자신이 가진 사상을 토론, 연구하며 실험, 실천하는 장이어야 한다"는 서강대 총학생회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동의한다. 김일성 주의니 주사파, 프롤레타리아트 사상이 얼마나 나쁜지 토론해야 한다.

■ 1월 14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한 입장은?

- 아예 그런 류의 기사를 실을거면 인터뷰할 가치도 없다.

인권하루소식 1995년 1월 18일 326호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는 종교·사상·양심의 자유 위배
인권단체 서강대 앞 시위, 박홍 총장과 면담 시도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연합 인권위 등 인권단체 회원 15명은 17일 오전8시30분경 서

강대 정문 앞에서 서강대측이 신입생들에게 좌경거부 서약서를 강요한데 대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날 8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서강대의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고발한다"면서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각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안옥희(61, 여, 민가협 공동의장)씨는 "박홍 뒤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있다. 지난해 여름 주사과파동에 이어 계속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고상만(전국연합 인권위)씨는 "서강대가 점차 반공대학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 서강대 학생들은 학교의 명예가 먹칠되어 가는데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교문 앞 시위에 이어 9시 15분경에는 교내로 들어가 박홍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박홍 총장의 부재로 이뤄지지 못했다. 민가협 회원들은 잠긴 총장실 앞에서 2시간 가량 문을 두드리며 학교직원,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날 학교 교문 앞에는 전경들이 대기중이었지만, 경찰과 마찰은 없었다.

한편, '서강대 총장실 유리창 투석사건'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마포경찰서 경찰측은 학생간부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1995년 1월 18일 326호

총학생회, '서약서 되돌려 받기' 전개

서강대총학생회는 17일 학교측에 공문을 보내고 서약서의 무효화와 이번 사건으로 '서강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총장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공문에서 ▲서약서는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강제적일 수 밖에 없으며 ▲가톨릭 서약은 종교의 자유에 명백히 위배되고 ▲학문·사상의 자유를 무시했으며 ▲서약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자의적 판단을 할 우려가 있고,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등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서약서를 무효화할 것과 신입생들과 함께 서약서 되돌려 받기 투쟁을 벌어나갈 것이며 우선 19일 오후3시 농구장에서 '새내기 새로 배움터 문제와 서약서 과문문제에 대한 규탄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